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충청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655
----------	-----

2021. 3. 23.(화)
정책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전원표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 2021년 3월 3일

다. 회부일자 : 2021년 3월 5일

라. 상정일자 : 2021년 3월 12일

- 제38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이상욱 의원)

가. 제안사유

-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충청북도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안 제2조)
-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규정(안 제3조)
 - 충청북도 내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법 적용 대상자로 등록된 사람
- 지원 사업의 내용을 규정(안 제4조)
 - 보훈명예수당, 위문품, 진료비 및 약제비 등
- 지원 중단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

3. 검토보고 요지 (김주희 수석전문위원)

가. 제출배경

- 본 제정안은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충청북도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하기 위함임.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사항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까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다른 국가유공자¹⁾와 함께 규정하였으나, 1995년 광복 50주년을 계기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우선 적용하도록 하였고, 동 법률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

1)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3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계승·발전시켜 민족정기를 선양하고,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는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예우의 기본 이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法統)을 계승한 대한민국은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바탕으로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龜鑑)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3조(국가 등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독립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켜 민족정기를 선양(宣揚)하며 제2조의 기본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 우리 도에는 현재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생존 애국지사 한 분과 독립유공자의 유족 이백 열 두 분이 계심.
- 타 시·도의 경우, 조례를 통해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게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공헌한 바에 합당한 예우로 보훈명예수당을 포함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우리 도의 경우, 의료비와 위문품 지원만 시행하고 있음.

※ 충청북도 지원현황 (‘20년 기준)

- 독립유공자 의료비 : 1인당 年 60만원
 - 지원대상 : 300명(독립유공자 200, 배우자 100)
 - 예 산 액 : 180,000천원(도비 48,300, 시군비 131,700천원)
- 독립유공자 위문품 : 1인당 年 30만원(농협상품권) * 3.1절, 광복절 각 15만원
 - 지원대상 : 200명(독립유공자)
 - 예 산 액 : 60,000천원(도비)

- 이에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공헌한 독립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합당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2조에서는, 독립유공자” 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 정의하고, “유족 또는 가족” 은 같은 법 제5조에 규정된 범위로 정의함.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建國勳章)·건국포장(建國褒章)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2. 애국지사: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배우자
2. 자녀
3. 손자녀(孫子女). 다만,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이미 자녀 및 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본다.
4. 며느리로서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자

- 안 제3조에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규정으로, 지원대상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충청북도 내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함.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현황 (20.11월말 기준)

(단위 : 명)

구 분	독립유공자 수			비 고
	계	생존 애국지사	유 족	
전 국	8,346	26	8,320	
충 북	213 (2.6%)	1 (3.8%)	212 (2.5%)	오상근 애국지사

○ 안 제4조에서는,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보훈명예수당 지급, 기념일 위문품 지원, 의료기관 이용 시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등을 규정함.

- 기념일 위문품 지원 및 의료기관 이용 시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사업은 「독립유공자예우지침」 제4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한 것이며, 보훈명예수당은 본 조례안에 따라 지급될 신규 지원 사업임.

- 현재 국가보훈처에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보상금, 사망일시금, 생활조정수당 등의 보훈급여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현재 11개 광역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를 통해 별도의 보훈명예수당을 추가 지급하고 있고,

- 충북도 내 11개 시·군도 각각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내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보훈 명예수당을 적게는 8만원(단양)부터 많게는 15만원(괴산, 음성, 증평, 진천)까지 추가 지원하고 있음.
-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와 복지증진 측면에서 볼 때, 도 차원의 보훈명예수당 지원은 필요한 조치로 판단됨. 다만 비용 추계에 따른 제 수당금액이 생존 애국지사 월 30만원, 유족 월 10만원으로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3만원보다 높게 책정된 점에서 다른 국가유공자들(전상군경, 순직군경,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4.19혁명 사망자 등)과의 형평성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안 제5조에서는, 부당한 지급, 지원대상자의 사망, 법 적용 대상자 범위에서 배제된 경우 등에는 지원 중단 또는 지급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도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하기 위한 것으로,
- 법적, 내용적으로 타당하며 조례안예고 및 집행부 협의를 거치는 등 절차상으로도 문제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충청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전원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55
----------	-----

발의연월일 : 2021년 3월 3일

발 의 자 : 전원표, 박형용, 이숙애,
이상욱, 이의영, 장선배,
허창원

1. 제안이유

-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충청북도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안 제2조)

다.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규정(안 제3조)

- 충청북도 내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법 적용 대상자로 등록된 사람

라. 지원 사업의 내용을 규정(안 제4조)

- 보훈명예수당, 위문품, 진료비 및 약제비 등

마. 지원 중단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

3. 의안전문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첨부

다. 협 의 :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라. 조례안 예고 : 2021. 2. 18. ~ 2021. 2. 24.(의회 홈페이지)

충청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충청북도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를 말한다.
2. “유족 또는 가족”이란 법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손자녀(孫子女), 며느리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충청북도 내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법 적용 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으로 한다.

제4조(지원 사업)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보훈명예수당 지급
2. 3.1절 및 광복절 기념일에 위문품 지원
3. 의료기관 이용 시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4. 그 밖에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 중단 및 환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급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2. 지원대상자 사망 후 지급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법 제39조에 따른 사유로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 경우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建國勳章)·건국포장(建國褒章)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2. 애국지사: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2. 6., 2012. 2. 17., 2015. 12. 22.>

1. 배우자
2. 자녀
3. 손자녀(孫子女). 다만,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이미 자녀 및 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본다.
4. 며느리로서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자

②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독립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독립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5. 12. 22.>

③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독립유공자가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어 입양한 자 1명만을 자녀로 본다. 다만,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입양된 양자의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개정 2015. 12. 22.>

④ 제1항제3호의 손자녀의 경우, 독립유공자 직계비속의 양자는 그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명만을 손자녀로 본다. 다만,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입양된 자의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개정 2015. 12. 22.>

⑤ 제1항제4호의 며느리의 경우, 제12조에 따른 보상금(報償金)을 받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유족이 없어야 하되, 해당자가 2명 이상이면 그 남편의 보상금 지급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先順位者) 1명으로 한정한다.

제6조(등록 및 결정) ①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요건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다만,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2.>

③ 삭제 <2015. 12. 22.>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적용 대상 독립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및 제5조에 따른 유족 등이 없어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독립유공자로 기록하고 예우 및 관리를 할 수 있다.

제17조(의료지원) ① 국가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의료지원을 한다.

② 독립유공자가 질병(부상을 포함한다)에 걸리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의료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한다. <개정 2015. 12. 22.>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진료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2.>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진료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2.>

제3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독립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4. 15., 2012. 12. 18., 2013. 4. 5., 2015. 12. 22., 2016. 1. 6., 2017. 10. 31., 2017. 12. 30.>

1. 「국가보안법」의 위반행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2.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3. 독립운동 공적(功績)에 중대한 흠결(欠缺)이 있다고 증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가. 「형법」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64조의 죄, 제27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5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의 죄,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와 제305조의 죄, 제332조의 죄(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또는 그 미수죄,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부터 제339조까지의 죄 또는 제337조·제338조 전단·제339조의 미수죄, 제34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50조, 제350조의2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63조의 죄

나.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

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7조제1항의 죄

5. 상습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자

6.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된 자

7.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충청북도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하기 위함.

2. 비용 발생 요인

- 보훈명예수당, 위문품,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3. 관련조문

- 조례안 제4조(지원 사업)

4. 비용 추계결과

- 재정수반 요인 : 5년간 총 2,554,500천원 정도 소요
 - ※ 보훈명예수당 1,278,000천원, 위문품 316,500천원, 진료비 및 약제비 960,000천원
- 추계의 전제
 -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을 대상으로 산출
 - 대상 : 211명(생존 애국지사 1명, 유족 210명)(‘20.12월말 기준)
 -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생존 애국지사(1명) : 月 300천원, 유족(210명) : 月 100천원
 - 위문품 : 1인당 年 300천원(211명) * 3.1절, 광복절 각 15만원
 - 진료비 및 의료비 : 1인당 年 600천원(320명) * 독립유공자·유족 211명, 배우자 109명
- 추계결과 : 2022년부터 향후 5년간 2,554,500천원 ※연평균 510,900천원
- 재원조달방안 : 도비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 연도별 비용추계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510,900	510,900	510,900	510,900	510,900	2,554,500
도 비	510,900	510,900	510,900	510,900	510,900	2,554,500
세 출	510,900	510,900	510,900	510,900	510,900	2,554,500
시 군	510,900	510,900	510,900	510,900	510,900	2,554,500

<항목별 비용추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합 계	2,554,500	510,900	510,900	510,900	510,900	510,900
보훈명예수당	생존애국지사	18,000	3,600	3,600	3,600	3,600
	유 족	1,260,000	252,000	252,000	252,000	252,000
위문품	316,500	63,300	63,300	63,300	63,300	63,300
진료비 및 약제비	960,000	192,000	192,000	192,000	192,000	192,000